

(...8페이지에 이어)
란 것 아닌가. 보스의 성추행을 옆에서 돕고 은폐하는 범죄 집단과 다를 게 뭐가.

박 전 시장의 비서진 등 최측근들은 서울시에서 이른바 '6층 사람들'로 부른다고 한다. 30여 명에 달한다. 시민 단체, 환경 단체 또는 과거 운동권 출신이 일반 공무원 출신보다 더 많다고 한다. 박 전 시장이 별정직으로 발탁한 사람들이 당연히 실세였다. 이들은 관련 법규상 박 전 시장의 임기가 끝나거나 퇴직하면 자동으로 면직된다. 서로를 '순장조'로 부르며 박 전 시장과 한 몸, 한통속으로 움직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박 전 시장의 '기쁨조' 역할까지 강요했을 것이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한 뒤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하고 기자회견을 열려고 하자 "확실한 증거 없이는 어려울 것" "여성 단체에 휩쓸리지 말라" "기자회견은 아닌 것 같다"며 압박, 회유, 은폐하려 했다. 한 다. 입만 열면 정의, 인권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성추행 피의자를 감싸고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한다. 과거 운동권의 '조직 보위론'을 연상케 한다. 이런 사람들이 9년 넘는 박 전 시장 재임 기간 중 1000만 수도의 행정을 맡아왔다.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박 전 시장에게 피해자의 고소 사실이 즉각 전달된 일에서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 측이 경찰에 고소하기 하루 전에 서울중앙

지검 담당 부장검사에게 피해 사실과 함께 박 전 시장 관련 임을 먼저 알렸다고 한다. 그런데 부장검사는 만나기로 한 약속을 갑자기 취소했다고 한다. 아마도 이 사실을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들에게 직보했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금 대통령 대학 후배가 장악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유서 작성, 공관을 나선 시각 등에 비추면 박 전 시장은 고소 사실과 내용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서울시와 경찰, 검찰, 청와대 등에서 알리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피해자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범죄 행위다. 누가 어떤 경로로 박 전 시장에게 알렸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난데없는 천도(遷都)론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2002년 대선에서 '수도 이전' 공약을 내걸 때 그의 지지율은 10%대였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지지율의 절반이었다. 돌과구가 절실했던 노 후보는 선대위 발대식 날 천도(遷都)론을 꺼내 들었다. 당시 캠프 핵심 인사는 "수도 이전 얘기를 안 하기로 하고 연설편에서 지웠는데 밤새 노 후보가 다시 썼다"고 했다. 내부에서조차 공약 효과를 두고 반신반의했다는 얘기가.

라 오랜 고민의 산물"이라고 했지만 '피돌이 참모의 조언과 노무현 승부수의 합작품'이란 게 중론이다.

▶당시 이회창 캠프 인사는 "처음엔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고 했는데 날이 갈수록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충청권 민심이 노 후보 쪽으로 쏠렸다. 노 대통령은 1년여 뒤 "그 공약으로 재미 좀 봤다"고 했다. 수도 이전 공약과 이에 대한 야당 대응은 이후 대표적 성공과 실패 사례로 선거 전략 교과서에 올랐다.

▶여권이 충청 천도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사전에 여론조사로 손해 볼 것 없다는 판단도 썼다고 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위기에서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충청 민심을 다시 붙잡을 수

도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충북지사가 충청도 집을 팔고 서울 집을 지킨 일로 충청 민심은 악화해 있었다. 야당은 찬반이 갈리고 있다. 정권의 속셈은 뻔히 알지만 충청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약으로 내걸 때 '10년 넘게 고민한 것'이라고 했다. 취임사에서도 이를 강조했다. 그러더니 소식 없이 몽게기 시작했다. '경호에 문제가 있다' '적당한 업무 공간이 없다' '특보다실이 많다'는 말들이 나오더니 2년 만에 없던 일로 만들었다. 수도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적 대사이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정부가 수도 이전을 검토하고 준비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대통령 집무실을 수백 m 옮기는 것도 못 하는 주제에 수도 이전이 라니"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역대 정권들이 국면 전환을 위해 꺼내 든 카드는 사정(司正), 개헌, 개각 등이었는데 이제 '천도'도 그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여성을 팔아먹고 사는

여자들과 남자들



문재민 29분 · 0

강남역 10번 출구 벽면은 포스트잇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생엔 부디 같이 남자로 태어나요". 슬프고 미안합니다.

1,418

댓글 45개 공유 36회

페미니스트 자체 文, 미투 불 지핀 여자들 여성 지지 받고선 박원순 성추행에 침묵 여성을 개인적 이익과 득표 무기로 이용한 것

2030 여성들의 정치의식이 반(反)보수로 흐르기 시작한 것은 광우병 사태 때부터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2030여성들로부터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광우병 사태 이후 극적인 변화를 보인다. 젊은 여성이 건강 문제에 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 사례는 많이 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 다른 지역 방사능 수치에 이상이 없음에도 많은 사람이 한동안 일본 방문을 꺼렸지만 그런 경향은 젊은 여성들에서 더 두드러졌다. 이제는 광우병 사태가 과장된 과답이 만든 소동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지만 당시엔 심각한 이슈였다. 생리대, 화장품까지 위험하다는 과답이 퍼지며 여성생, 여고생들이 시위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나중에 젊은 주부들 로까지 확산됐다. 사태 후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2030 여성의 지지도는 6%로 급전직하했다.

이 현상은 여성인 박근혜 대통령도 바꾸지 못했다. 오히려 굳어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20대 여성 지지는 문재인 후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박 26%, 문 63%였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 현상에 대해 젊은 여성들이 박 후보를 같은 여성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여성의 모습을 한 꼰대'나 '금수저 공주'로 보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과거 여성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기록은 잘 찾을 수 없다. 당에 들어와 여성 행사에 참석할 때 의례적인 연설을 한 정도였던 것 같다. 하지만 패하긴 했어도 2012년 대선 때 젊은 여성들의 압도적 지지는 문 대통령이 이를 큰 자산으

로 여기게 된 계기가 된 듯하다. 이때부터 문 대통령의 자세는 바뀐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2016년 벌어진 서울 강남역 '묻지마 살인'이다. 한 정신질환 남자가 젊은 여성을 이유 없이 살해한 사건에 여성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를 남성들의 여성 혐오와 여성의 열악한 처지가 드러난 사건으로 보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이 현상의 정치적 가능성을 파악한 사람들은 문 대통령 진영밖에 없었다. 당시 문 전 대표는 혼자서 강남역을 찾아 추모하는 젊은 여성들과 함께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다음 생(生)엔 부디 같이 남자로 태어나요'라는 글을 인용해 올렸다.

젊은 여성들 사이에 문재인 팬덤이 형성됐다. 이들은 나중에 '우리 아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말을 만들고 지하철에 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를 올리기도 했다. 이 지지는 거의 콘크리트와 같아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한마디로 충성 집단이었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를 페미니즘(여권 운동) 대통령이라고 선언하고 성(性)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빠짐없이 개입했다. 심지어 대통령이 버닝썬이라는 클럽에서 벌어진 일을 "검경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가짜 페미니스트 박원순의 파탄은 문 대통령의 이런 '페미니즘'도 깊은 성찰과 결단 끝에 나온 진정한 철학인지, 아니면 젊은 여성들의 환심을 사서 표를 얻으려는 가식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문 대통령은 진보 진영 인사들이 잇달아 미투 운동의 대상이 된 사태에 대해 "이는 여성 인권 문제"라면서 "성폭력 발본색원"을 지시했다. 그때까지 가해자들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를 놓고 경쟁했던 사람, 검찰 간부, 예술인 등이었다. 문 대통령은 여기가

지는 여성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말 자기편, 예컨대 탁현민 같은 사람에 대해선 여성 편이 아니었다. 저열한 여성 비하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꺾이지 않았다. 심지어 청와대로 다시 불러 왕행관관이 되게 만들었다. 그러다 터진 박 시장 사건으로 문 대통령의 '본색'이 드러났다. 가해자인 박 시장에 대해선 애도를 표하면서 피해 여성에 대해선 단 한마디 위로조차 건네지 않았다. 상처받은 많은 여성을 향해서도 "발본색원"을 약속하기는커녕 침묵했다. 온 나라를 들쭉일 정도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밝히려는 수많은 요구에도 침묵했다. 민주당이 '박원순'님의 뜻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어이없는 플래카드를 걸어도 침묵했다. 문 대통령의 침묵은 사실상 성추행 가해자 지지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 여성을 비난하는 열성 지지층 동향을 의식했을 것이다. 미투 운동을 일으킨 여성들이 박 시장에 대해 침묵하는 것과 같다. 부산시장만이 아니라 서울시장 보선까지 치르게 된 상태에서 자기 진영의 도덕성 붕괴를 자인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문 대통령의 취임사는 멋지지만 진실하지 않은 가식의 향연이었다. 국민통합, 집무실 이전, 권력기관 독립, 탕평인사, 수시 소통, 직접 언론 브리핑, 평등·공정·정의 등 거의 반대로 됐다. 이제 '페미니스트 대통령' 하나가 더 추가됐다.

성명 한 장 내고 입을 닫은 일부 여성 단체들과 그들이 배출한 여성 국회의원들에 대해 누군가 "여성을 팔아먹고 사는 여자들"이라고 평했다. 여성을 정치에 이용한 남자들도 마찬가지다. 여성을 이익과 득표의 무기로 쓴 사람들이다.

[양상훈 칼럼]

박원순 피해자 면담 취소시키고

靑에 알린 게 이성운인가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이 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하기 바로 전날 고소 예정 사실을 검찰에 먼저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변호사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을 요청했다고 한다. 변호사는 부장검사가 '면담하려면 피고소인이 누군지 알아야 한다고 하자 '박원순 시장'이라고 알려줬으며 8일 오후 3시로 면담 약속을 잡았다고 했다. 그런데 부장검사가 그날 저녁 전화를 걸어와 '다른 일정이 있다'며 면담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피해자는 박 시장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해야 했다.

부장검사 측은 "고소장 접수 전 면담은 절차에 맞지 않아 취소한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일정이 있다고 했다.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는 중대 사안이다. 더구나 해당 부장검사는 주요 성폭력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박

시장이라는 걸 알았다면 먼저 조사하겠다고 나서지는 것이 상식이다. 실제 부장검사는 박 시장이라는 걸 알고 피해자 면담 약속까지 잡았다. 그런데 몇 시간 뒤 돌연 면담을 회피했다. 그레놓고 이제 와서 '절차가 맞지 않아서'라고 한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사들은 수사 정보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다. 박 시장 문제도 차장검사와 지검장에게 즉각 보고됐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이성운 지검장이 보고받았다는 것이다. 당연할 것이다. 그렇다면 '면담 취소'는 이 지검장의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 대학 후배로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대신에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 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에게는 박 시장 관련 사실을 일절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내용이 가해자 쪽에 들어가 증

거인멸, 협박, 회유 기회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명백한 범죄다. 지금까지는 피소 내용을 검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 그보다 하루 앞서 알고 있었고, 내부적으로 쉬쉬해 온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 지검장은 박 시장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나. 부장검사의 피해자 면담을 취소시키고 이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 아닌가. 이 지검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관련자 모두가 수사 대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시장 피소 유출 사건 수사를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지검장이 지휘하고 있다. 자기 문제를 자기 수사하는 꼴이다. 그래서 일지 서울중앙지검은 고소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도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일부러 미적대는 것이다. 수사 대상이 지휘하는 수사를 누가 믿겠나. 이 지검장은 즉각 손 떼고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SL Dental Centre on 4th ST
(previous Killarney Dental Clinic owner)

한인 치과의사 산 리 Sean Lee

Tel: 403-228-5367 / Fax: 403-229-2876
website: www.sldentalcentre.ca
email: mission@sldentalcentre.ca

SL DENTAL CENTRE: 1000 Mission Professional Bldg
2303 4th Street SW, Calgary, Alberta T2S 2S7